

# “전북도 임업행정 환골탈태 절실”

양해석 도의원, 5분 발언서 “도 보호수 지정 639본… 도단위서 제주 빼고 최하위 보호수 관리 사무 사실상 방치 · 연평균 2억5000만 수준에 그치는 예산도 확대해야”

전북도의회 양해석 의원(남원2)이 22일 열린 제40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보호수 관리 실태를 꼬집으며 전북도 임업행정의 환골탈태를 주문했다.

보호수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해재권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리 사무는 일선 시군에 위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위임사무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호수 관리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보호수 현황도 제대로 파악·유지되지 않고 있고,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



해야 하는 보호수 점검도 지난 해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단적인 예다.

사실상 전북도가 위임 사무를 떨미로 시군에 맡긴 채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는 실정이다.

보호수 지정현황 자체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보호수 지정은 639본으로 전

국 1만3,859본 대비 4.6%밖에 되지 않 는다. 도단위 지역으로 비교해봐도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적은 수치다. 1,842본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충남이나 4,105본을 지정 관리하고 있는 전남과는 큰 차이가 있다.

연평균 2억5,0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쥐꼬리 수준의 관련 예산도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

매년 50그루 가량을 선정해 연차별 순환 관리하고 있는 현행 방식이라면 도내 전체 보호수를 대상으로 한 번씩 관리하는 데 12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양해석 의원은 “단순 물

리적 조건에 초점을 맞춘 보호수 선정기준을 생태학적 가치와 지역공동체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고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스마트 보호수 관리를 하고 있는 서울 사례나, 보호수에 얹힌 인문학적 소재를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경남 등 타지역 사례를 본받아 보호수 활용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 의원은 “지난 3년간 도내 보호수 지정은 4건에 불과한 반면, 수세 악화나 태풍피해 등으로 인해 해제된 보호수 건수는 10건”이라면서, “지정건수와 해제건수의 역전현상이 계속된다면 도내 보호수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재훈 기자

전용태 도의원, 도의회

신임 예결위원장에



전북도의회는 22일 제4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용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안)을 비롯한 11명 위원을 제2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날 선임된 예결위 위원들은 제5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전용태(더불어민주당 진안)의원을 비롯한 위원장에 김슬지(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을 선출하고 7월부터 제2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 시작한다.

전용태 신임 예결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북도청 및 도교육청 소관의 예산과 결산 전반에 대하여 철저한 심사와 감시자로서,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함께 도민의 복리증진과 전북교육 발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정한 절차의 준수와 공익적 책임을 다해 도민들에게 신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전북으로’

의원들은 22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00만 전북인 열원과 180만 도민의 열망을 담아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전북으로’라는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기원했다.

## “잼버리 청소년리더센터, 국제교육원 활용”

김슬지 도의원, 5분 발언서 “도교육청 국제교류 정책 확대 추세에도 전담기관 부재

교육청 산하 국제교류 관련부서 재조정해 인력 확보 · 리더센터 활용… 예산 절감 효과”



등 약 27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슬지 의원은 “학생 해외연수는 단순한 해외 여행을 넘어 견문을 넓히고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면서 “국제교류·교육 전담기관 설립으로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업무의 전문성과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담기관이 설립된다면 해외연수뿐만 아니라 다문화교육, 국제제이格外교, 문화다양성교육, IB(국제발카레오)교육과정, 국제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특히 다문화 이동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전북은 다문화 학생과 가정을 위한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따르면, 향후 4년 동안 전북교육청 해외연수 규모는 학생 1만 190명으로, 교직원까지 추산하면 약 1만2,4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교육감 공약 역시 세계시민교육, 학생 해외연수, 국제교류 확대, 외국어지원

김슬지 의원은 “이미 7개 시도교육

청이 국제교육원을 오래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고, 올해 대전시교육청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발표했고, 세종시교육청도 국제교육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관설립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문제지만 현재 지원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도교육청 산하 국제교류·교육 관련부서(정책기획과 국제교류팀(7명), 민주시민교육과 잼버리·다문화팀(6명), 창의인재교육과 외국어교육팀(5명), 영어체육센터 등 103명)를 재조정하여 인력을 확보하고 학교 통폐합에 따른 지원 예산과 전북도가 새만금잼버리 개회를 위해 견립하고 있는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를 활용하면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적극 협력해 글로벌리더센터를 국제교류·교육센터로 활용한다면 새만금국제공원 등 새만금의 이점을 심문 활용할 수 있다”면서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축구”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22일 이날도 전북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전북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전북연구원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전북연구원장 후보자로서

기관에 대한 큰 애정을 갖고 있는 점, 외부요인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을 운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반면,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서에 대내외적으로 논의된 바 없는 연구원 신축·이전, 도내 시·군 전담연구원 배

치를 기술하는 등 전북연구원 운영 및 조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전북특별자치도, 제3금융중심지, 공공의대, 이차전지 산업 등 도정 현안에 대한 이해도는 높으나, 명확하고 구체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채택된 경과보고서는 22일 본회의에 보고를 거쳐 전북도지사에게 송부된다.

/김재훈 기자



도의회 의원 7명 ‘우수의정대상 수상’

전북도의회 김동구(군산2) · 김성수(고창1) · 김정기(부안) · 박정희(군산3) · 이수진(국민의힘 비례) · 임승식(정읍1) · 장연국(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22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선정한 제13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수상받은 의원들이 22일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국주영은 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제주도 상징 ‘돌담’ 시초

### 전북 출신 인물로부터 비롯”

김정기 도의원, “전라유학진흥원 부지 내

돌담 조성… 역사적 인연 알리고 계승하자”

전북·제주 교류협력 실무협의 개시도 촉구



시조가 전북 출신의 인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며 “전라도 천년사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하지만 간파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포 김구를 배향하는 도동서원터가 자리하고 있는 전라유학진흥원 부지 내에 제주돌담을 조성함으로써 1234년 시작되어 789년이 된 전북과 제주의 역사적 인연을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승해나가고 제안했다.

앞서 김정기 의원은 지난 4월 중순 제주도 오영훈 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 및 복수의 의원들을 만나 제주 현무암을 전북으로 반출하여 돌담을 조성하는 방안에 관해 의사를 타진했으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하고 돌아온 바 있다.

기본적인 구상인을 가지고 오면 구체적으로 협의를 이어가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 지도부의 반응이라는 점을 확인한 만큼 이제는 전북도가 기본구상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협의 개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제주 현무암은 제주도 조례에 따라 보존지원으로 분류돼 임의 반출 또는 판매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향토문화 교류 목적이나 공공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김정기 의원은 “제주도가 전라도의 일부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제주도를 상징하는 돌담의 개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제주 현무암은 제주도 조례에 따라 보존지원으로 분류돼 임의 반출 또는 판매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향토문화 교류 목적이나 공공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김정기 의원은 “제주도가 전라도의 일부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제주도를 상징하는 돌담의 개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제주 현무암은 제주도 조례에 따라 보존지원으로 분류돼 임의 반출 또는 판매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향토문화 교류 목적이나 공공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전북도의회 박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실)

은 22일 제4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집필한

‘전라도 천년사’가 왜곡된 사관을 바탕으로 쓰인 ‘일본서기’ 속 기술을 인용했다”며 “인용한 고대사 부분을 즉각 삭제하고 제3의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검증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전북 남원을 ‘기운’, 장수를 ‘반파’, 전남 진전·해남을 ‘침미다례’, 전남 순천을 ‘사타’라는 일본서기속 임나4현의 지명을 그대로 사용했다”며 “국내 어느 역사서나에도 남원이 ‘기운국’이라는 기록이 없고 전라도 천년사를 되새기기 위해 집필된 책에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지명을 쓰는

것은 전라도가 일본의 지배 속에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우매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사료가 부족해 일본서기를 인용한 고대사 부분을 삭제하고, 전라북도 학예사들과 제3의 전문가들로 검증위원회를 구성, 문제 된 부분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제안하고 이러한 제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라도 천년사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라도 천년사’는 전라북도 주관으로 광주시, 전남도와 함께 전라도 정명 천년을 기념해 지난 2018년 편찬을 시작한 역사서로 총 24억원의 예산과 2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34권 1만3천쪽에 달하는 역사서집필을 완료해, 지난 연말에 출판할 예정이었다.

한편 박정규 의원은 아울 제12대 전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김재훈 기자